

수도권 규제완화 놓고 지역 대립 확산

## 한나라 수도권-영남권 '분화' 조짐

### 당론·계파 초월 지역간 대결 비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놓고 정치권이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로 나뉘면서 본격적인 세력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질적으로 지역 이해기반을 바탕으로 한 이슈인 탓에 정당과 계파에 상관없이 지역 간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 내에서는 계파를 초월해 두 핵심기반인 수도권과 영남권의 '분화' 조짐마자 나타나고 있다. 현재 당내 판세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84석을 획득한 반면, 영남권 등 비(非) 수도권은 66석에 그치면서 당시의 무게 추가 영남권에서 수도권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방부 경남 남해 출신인 박희태 대표와 서울 출신인 홍준표 원내대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표는 지방의 반발과 동요를

무마하기 위해 '선(先) 지방발전, 후(後)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홍 대표는 수도권에 대한 일방적 규제에 반대하며 '국토 동반발전'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계 내부에서도 '온도차' 느껴진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3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선과 후가 바뀌었다"고 밝힌 데 이어 4일에는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신설도 좋지만 그런 대책을 기다리기에는 지방 사정이 너무 절박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친박계 의원은 "지역 특성상 환경과 교통문제 등 '자족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는 계파와는 상관없는 지역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광근 서울시당위원장과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 홍일표 인천시당위원장 등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非)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5개 국회 지역균형발전 관련 단체가 모인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도 6일 발족식을 갖고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급하다"면서 "하지만 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지역 의원들이 모여 '선(先) 지방발전, 후(後) 규제완화'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민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급하다"면서 "하지만 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정세균 대표 "정부 국가균형발전 말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5일 "이 정권은 가히 국가균형발전 말살정책을 선포했다"면서 "지방 죽이기, 균형발전 말살 정책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국무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

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바꾸는 등 모든 부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이란 이름을 지웠다"며 "헌법 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육성 의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태도는 현 법 가치에 역행하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재정 격차 완화 보완책 마련하면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문제 없어"

###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견의를 해 온 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 문제를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지방정부 보완 문제에 대해선 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재정조정제도"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내년에 분권 교부세 제도가 만료되고 목적세가 3가지나 폐지되거나 때문에 어차피 관련 제도를 확장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문제를 비롯해 지방재정에 관한 치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이 지역간 재정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가령 소비세와 관련해선 일반소비세와 부가가

치세, 주세 가운데 어떤 것을 넘길 것 이나 따라 다양한 방안이 있고, 그에 따른 과금효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소득세 등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방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수석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지방홀대 논란'에 대해 "세계화가

진전된 상황이라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그 공장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계적 완구업체인 레고가 수도권에 레고랜드를 지으려다 못짓게 되자 아예 다른 나라로 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특히 "새 정부 출범후 지방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 12가지나 되는데도 사실을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논의중에 있다"면서 "금융중심 도시를 지방에도 하나 두는 조치를 통해서 금융 문제까지 중앙과 지방이 서로 역할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지방홀대 논란'에 대해 "세계화가

### "교육시스템 바꿔야"

#### 李 대통령 '인재포럼' 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선진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혁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08'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수월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도 교육의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로 키워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최근 과거 정부의 '평준화'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표방하는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교육진화'라는 교육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연합뉴스

## 김정일 이번엔 군부대에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방문 사진.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부대 시찰 일시와 위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 北중앙통신 사진 또 공개…전문가들 "건강 이상 확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축구경기를 관람한 데 이어 군부대 두곳을 이달아 시찰함으로써 건강을 상당히 회복해 정상적 가운데 김 위원장이 맨 앞줄 중앙에 서 있는 이른바 '집체사진'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공개된 북한군 축구대회 관람 때는 두툼하면서도 걸면이 부드러워 보이는 갈색의 반코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바다에 편평한 일명 '캡퍼트' 신발을 신었으나, 이번 군부대 시찰 사진에선 헤이크에 갈색 바지 차림이며, 구두는 굽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축구경기 관람사진에서는 김 위원장의 원손이 부자연스럽게 무릎에 올려져 있거나 상의 주머니에 걸쳐져 있어 '건강이상'을 방증했으나, 이번 2장의 단체사

진에선 이를 의식한 듯 원손도 주

머니 밖으로 내려뜨린 '차렷' 자세를 취했다.

북한 언론이 김 위원장의 북한군 축구경기 관람을 보도한 자사

내보낸 것은 김 위원장의 대내외에 '건재'를 거듭 확인시킬 필요성과 함께, 특히 미국의 대선을 의식해 당선인에게 대미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군부대 시찰 단체사진 역시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중앙통신이 이날 부대별 단체 사진 1장씩만 내보낸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 국회 '언론 장악' '인터넷 규제' 공방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5일 한승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 '언론 장악'과 인터넷 규제, 교과서 수정, 식품안전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구본홍 사장 임명으로 축발된 YTN 사태와 국가정보원 원족이 참석한 '언론대책회의'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YTN과 KBS 사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됐다는 점을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현 의원은 "이 정권은 경제회생에는 아마추어, 언론장악에는 프로"라면서 "YTN 사태가 아니라 YTN 공정방송 사수운동으로, 이 문

제 해결에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KBS와 YTN 사장 임명에 대해 맹비난했지만 예전 열린우리당이 한 절차와 방식을 그대로 한 것"이라며 "특히 KBS 사장은 중립적인 사

람을 사장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

##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 제주도 제주시 노령동 741번지 ◆ 등록번호 616-81-68236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을 쳐보세요!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충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충전마진을 돌려